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상속세·소득세 높아... 증부세, 재산세와 통합 안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가 모두 높은 나라”라며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이 주경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상속세를 줄이면 소득세 부담이 커진다는 질문에 “상속·증여세율과 국세·지방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둘 다 높은 수준이며 최고세율이 높은 부분도 있지만 소득 분위별로 봤을 때도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이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속세는 1997년, 2000년 이후 개편이 없어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편을) 논의해보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27% 수준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OECD 평균 36%를 크게 웃돌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해서는 “증부세는 지방 세수로도 활용되므로 여러 고려들이 함께 되어야 하며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역 간 예산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 증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세수 펄크에도 서민 증세는 없을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현재 담뱃세와 부가가치세 인상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는 연 2회(7월, 9월)로 나누어 과세되고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과 주택 외 건축물, 선박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 45만 원 이상의 재산세는 8월 31일까지 미납 시 매달(최대 60개월까지) 0.66%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ARS ▲현금인출기 ▲가상 계좌 납부 ▲ETAX(서울시) ▲서울시 STAX 앱 설치 후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사 앱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 정책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재산세 과표 산정을 위한 비율) 특례 조치를 연장했다.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45%로 유지한다.

아울러 주택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0.05% 인하된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하여 재산세 납세 부담을 완화했다.

### 재계, R&D 준비금 제도 신설과 사업손실준비금 '부활' 해야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4차 토론회에서 중소기업 조세지원 현황과 과제 발제자로 나섰다.

노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를 통해 2013년 폐지된 R&D준비금 제도를 신설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한도로 준비금을 계상한 후 3년 이내 R&D사용 시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을 통해 성장잠재력과 과세이연을 하자고 제안했다.

또 2006년말 폐지되었던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역시 신설해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이 향후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이익 중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3년 후 익금을 산입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요건 완화를 통해 소득금액 구간과 공제한도 현실화, 중도해지 요건 완화, 퇴직소득세 미부과 등의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노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를 통해 2013년 폐지된 R&D준비금 제도를 신설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한도로 준비금을 계상한 후 3년 이내 R&D사용 시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을 통해 성장잠재력과 과세이연을 하자고 제안했다.

또 2006년말 폐지되었던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역시 신설해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이 향후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이익 중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3년 후 익금을 산입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요건 완화를 통해 소득금액 구간과 공제한도 현실화, 중도해지 요건 완화, 퇴직소득세 미부과 등의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